



의료비 폭등, 환자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 민영화에 맞선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

보건의료노조가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에 맞서 오늘(6월 24일)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의료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7월 2차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6월 10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부대사업 확대)과 영리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조치들은 병원들이 돈벌이에 매달리지 못하도록 막아 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첫째, 박근혜 정부는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 한다. 물론 지금도 대다수 병원은 주차장이나 장례식장 등 부대사업으로 ‘진료 외 수익’을 벌어들인다.

이런 시설 중 일부는 환자와 보호자들
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병원 진
료와 관계없는 것으로 분리해 따로 돈을
받고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
화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그 범위를 외국인 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으로 크게 확대했다. 심지어 다른 사업자에게 병원 건물 일부를 임대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이 크게 늘 것이다.

예컨대 병원 내에 고급 숙박 시설을 설치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부대사업이므로) 입원실이 생기는 셈이다. 병원과 관계 없는 ‘미용업체’가 입주해도 환자들 눈에는 해당 병원 피부과나 성형외과가 인증하는 업체로 보일 수 있다. 의료진이 해당 업체를 이용하라고 부추길 가능성도 크다. 과잉진료도 크게 늘 것이다. 이 업체의 수익이 병원 수익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영리·병원 하용

둘째, 병원이 이런 부대사업을 전담할 ‘자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부대사업 확대와 결합돼 사실상 영리 병원을 허용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현행법으로 영리병원은 금지돼 있다.

이 규제 때문에 일부 부대사업을 허용해
도 재벌과 주요 대기업들이 직접 뛰어들
지는 못했다. 이윤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
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자회사’라는 중간 다리를 놓아 영리 추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자회사 설립 조건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삼성 같은 재벌들이 그런 조건을 갖추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게다가 ‘가이드라인’은 법적으로 아무 구속력이 없다.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해야 하는 영리 '자회사'는 차츰 진료와 직접 연관된 부분도 부대사업에 포함시키려 할 것이다. 새로운 부대사업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다. 지금도 환자들이 필수 의료용품을 병원 매점에서 구입하곤 한다.

부대사업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환자들의 실제 부담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의료비 전체가 크게 늘어나고 과잉진료가 늘면 민간의료보험 시장은 확대되겠

지만 그만큼 국민건강보험은 위축될 것이다. 혹은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돼 보험료를 크게 올려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병원과 보험사,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들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은 질병과 경제적 고통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다. 경제난은 그 자체로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을 파괴한다.

건강보험 축소

요컨대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같은 노골적인 방식 대신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법인 설립 같은 꼼수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 의료 민영화를 강력히 반대하기 때문이다. 다섯 달 만에 40만여 명이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한 사실이 이를 잘 보여 준다. 또, 최근 보건 의료노조 등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0퍼센트 이상이 영리 자회사

>> 뒷면으로 이어짐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파업

생명과 안전, 노동자 권리를 지키는 투쟁

지난해 진주의료원 폐업에 맞선 투쟁은 ‘착한 적자’라는 표현을 유행시켰다.

생명보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장논리에 맞서, 평범한 사람들의 필요를 위한 ‘적자’는 정부가 마땅히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투쟁은 이런 ‘공공성’을 파괴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대변하는 구실을 할 수 있다.

의료 민영화에 맞선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환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병원이 수익성에 매달릴수록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인건비를 줄이려는 시도도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민간 비영리 병원 간호사 시급이 27달러일때 영리병원 간호사 시급은 25달러였다. 비영리에서 영리로 전환한 병원들은 대개 인력을 감축했다. 지금도 한국의 간호 인력은 선진국의 3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된다.

이처럼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강화될수록 환자의 안전은 위태로워진다. “간호사가 말아야 할 환자가 한 명



3월 11일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 출범 기자회견.

더 늘어날 때마다 환자의 입원 30일 내 사망률은 7퍼센트 증가하고, 간호사 탈진은 23퍼센트, 업무 불만족감은 15퍼센트 늘어난다.”

실제로 박근혜가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는 지금 경희의료원 등 민간 병원 경영진들은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서울대병원도 수백억 원을 들여 병원 지하에 대규모 부대사업 시설을 짓겠다고

나서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노동자들의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공단 인력을 감축하고 공공병원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 모든 공격에 맞선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자 정의로운 투쟁이다. 이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자.

>> 앞면에서 이어짐

와 부대사업 확대 같은 의료 민영화에 반대했다.

따라서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계급과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건강을 지키고자 투쟁에 나선 것은 커다란 의의가 있다.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광범한 반대 여론과 불만을 결집시키는 구심이 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철도 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 파업과 ‘안녕들 하십니까’ 운동으로 기억되는 사회적 연대 운동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는 노동자 파업과 광범한 단체들이 참가하는 정치운동이 서로 고무하며 결합된 결과다.

보건의료노조가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맞서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에도 며칠 만에 1백 개가 넘는 단체들이 이 투쟁 호소에 응답해 한자리에 모였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이어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도 오는 27일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하루 파업과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6월 28일에는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 사회보험노조,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 등이 함께하는 ‘생명과 안전의 물결’ 행진도 예정돼 있다. 정부의 의료 민영화에 맞서 병원 노동자들이 함께 행진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다. 또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투쟁은 세월호 참사로 터져 나온 대중적 분노를 대변하는 구실을 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단결 투쟁과 사회적 연대가 7월 파업과 이후 투쟁에서 한층 더 발전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는 일도 불가능하지 않다.

또 다른 재앙을 낳을 의료 민영화에 맞서 함께 싸우자.

철도-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생명과 안전의 물결” 행진

일시 : 2014. 6. 28(토) 14:40

장소 : 서울역 → 청계광장

주최 :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

박근혜 퇴진!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통상임금 정상화!

6.28 노동자 총결기의 날

일시 : 2014. 6. 28(토) 16:00

장소 : 청계광장(이후 행진)

주최 : 민주노총

공공의료 파괴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과 함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도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기관 정상화’는 정부 정책 때문에 생긴 부채를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공격이다. 이 공공기관에는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의학원 등 공공병원도 포함된다.

박근혜 정부는 복리후생비 등을 “과다 지급”하는 20대 ‘방만 경영’ 기관에 국립대병원인 부산대병원을 포함시켰다.

지난해에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려 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강원도 강릉·원주 의료원도 ‘착한 적자’를 문제삼아 민영화하려 한다.

공공병원인 원자력의학원의 진료기능을 축소하고 인력을 줄이려 한다. 국립

중앙의료원을 국립암센터와 통합해 중복된 기능을 통폐합하는 등의 구조조정 계획도 폭로된 바 있다.

그러나 “국립대병원의 부채를 증가시킨 것은 국립대병원 경영진이 결정하고 교육부가 승인하여 진행된 무리한 시설투자 경쟁”이다. 부채의 책임은 정부와 병원 경영진에게 있다.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의 부채는 다른 한편으로는 꼭 필요한 지출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연구 결과를 보면, “2012년 33개 지방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에서 발생한 총 손실액 1천3백63억 원 중 63.7퍼센트인 8백81억 원이 ‘착한 적자’였다.

필수의료 수행, 사회취약계층 진료 등 공익적 의료 활동으로 발생한 적자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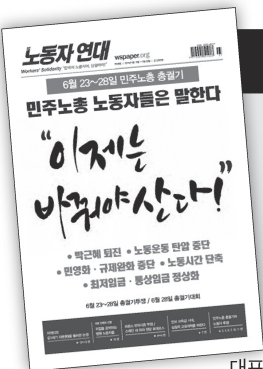
뜻이다. 이런 적자는 마땅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공공병원을 ‘정상화’한다면서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홍준표가 ‘강성노조’, ‘귀족노조’ 운운하며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을 공격했듯이 말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공공기관 정상화는 노조활동의 정상화”라고 했다. 한 마디로 노동조합을 약화시켜 길들이겠다는 것이다.

공공병원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은 민간병원 노동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기도 하다.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가짜 “정상화”에 맞서 함께 싸우자.



노동자 정치 신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 연대

를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http://wspaper.org>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장호중 지음
노동자연대
100쪽 3,500원